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57호(99/9/21)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world.net/~rights/>



“학살은 중단되어야 한다”

9월 14일 국내 16개 시민사회단체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

*** 동티모르 독립운동 후원구좌 ***

한빛은행 112-07-226022(예금주: 이주영-동티모르)

'국보 7조 완전 삭제' 투쟁 깃발 올라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발족, 조직 구성 완료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7조 완전 삭제를 우선 목표로 내건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보연대)가 1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20일 기독교회관에서 대표자회의와 결성대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습니다. 국민연대에는 20일 현재 전교조 등 2개의 교육단체, 민예총 등 7개의 문화예술단체, 인의협 등 10개의 보건의료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8개의 시민단체, 여연 등 30개의 여성단체, 민가협, 민변 등 15개의 인권단체, 목협,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등 24개의 종교단체, 민교협 등 6개의 학술단체, 광주시민연대 등 8개의 지역단체와 한국노총,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각계 각층이 참가했습니다. 이는 91년부터 1년 정도 활동한 적이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이후 가장 많은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이란 단일한 주제 아래 결집된 연대기구입니다.

오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가보안법 개정 국면에서 국가보안법 7조의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활동하게 될 국보연대는 지난해 사랑방과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에서의 논의로 출발했습니다. 국제캠페인팀에서는 지난 5월 캠페인팀에서 이를 제안하기로 한 뒤 9월 1일 27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관련 시국성명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국보연대 결성을 준비해왔습니다. (국보연대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 실린 자료

와 동봉하는 <활보> 창간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결성대회에서는 국보연대를 이끌어갈 지도부와 집행부의 인선도 완료했습니다.

공동대표는 참가 단체 대표 모두로 구성하고, 상임대표로는 -김중배(언론개혁시민연대), 이부영(전교조), 최영도(민변) 등 각계 대표 14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고문으로는 리영희, 강만길 선생도 원로급 지도자 18인을 모셨습니다. 이외에도 단체로 결합되지 않거나 단체보다 개인활동이 두드러진 사회 지도급 인사를 개인위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보연대의 업무를 총괄하게 될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박원순(참여연대) 김용태(민예총)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이장희(경실련) 윤종현(민변) 등 5인이 선임되었으며, 집행위원으로는 조영숙(여연) 김거성(민주개혁국민연합) 나효우(기사협) 남규선(민가협) 김주언(연개연) 이승환(민족회의) 김지영(인의협) 정진우(목협) 씨 등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집행 단위 외에 법안연구, 언론홍보, 조직 등의 특별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장과 실무진의 구성은 각 단체에서 실무진을 파견한 뒤 구성하기로 하여 실무력은 아직 미약한 편입니다. 현재 국보연대의 실무 담당자로는 사랑방의 김정희씨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캠페인팀은 지난 6일 공식적인 해체를 결의하였고, 국보연대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서대표는 국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중임을 맡아 이 사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사 / 업 / 보 / 고

(99년 8월 넷째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

4회 인권영화제 준비 박차

10월 29일부터 7일간, 동국대에서

올해로 4회를 맞게 되는 인권영화제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1주일간 동국대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 영화제는 예년에 비해서 준비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시사회를 가져서 작품 선정을 해왔는데 현재 외국작품은 모두 27편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7편 중에는 단편영화 5편이 포함되었으며, 애니메이션 영화가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미국의 흑인민권운동을 다룬 <All power to the people>과 러시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총체적 풍자를 다룬 <Outskirts>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 작품은 10여편을 놓고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영화제에서 신설되는 부문은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작품을 공모하는 '카메라 인권지기' 섹션입니다. 이는 작품성은 뒤진다고 해도 인권침해 현장을 기록한 작품들을 모아서 이를 상영할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인권 자료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인권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올해 출품된 영화 중에 한 작품을 선정해서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영화제 기금 마련을 위해 예년처럼 후원회

원도 모집합니다. 특별후원회원은 개인당 10만원을 내면 특별후원회원에게는 <칠레전투>, <쇼아>와 올해 상영되는 영화 중에서 몇편을 묶어 이중 본인이 원하는 작품을 택일하여 증정합니다. 일반 후원회원도 마찬가지로 1만원을 내면 해설책자와 기념품 증정을 증정하게 됩니다.

한편, 1회부터 계속해 왔던 지역인권영화제는 부작용이 심각해 더 이상 사랑방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심 끝에 올해부터는 지역영화제는 하지 않으며,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추석 직후 발송할 홍보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후원회원으로 참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대표 재판 1심 결과 절반의 승리

서준식 대표 국가보안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지난 7일 서부지원 40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형사단독 3부 오석준 판사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인권하루소식>에 실렸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지난 97년 11월 4일 긴급체포로부터 1년 10개월동안 끈 재판과정에서 국내외의 인권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지원을 이끌어냈고, 이런 노력은 국가보안법 투쟁에서 자그마한 투쟁으로 결과된 것입니다. 이런 1심 재판 결과에서 대해 곧바로 항소를 하였고, 보안관찰법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의 방법도 쓸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안

관찰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꽤 오래 걸리겠지만, 최종 승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권위원회; 민영교도소 의견서 제출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 민영교도소에 관한 의견서를 각 정당과 법무부,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사랑방의 제안으로 민교협, 민가협, 민주법연, 인권실천시민연대, 사회진보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7개 단체 연명했습니다. 입법예고된 민영교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정기국회가 통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의견서에서 ① 재소자의 교정교화는 경제논리로 밀려날 수 없는 국가의 고유 책무라는 점 ② 사기관화된 교도소는 국민의 감시와 국가의 책임선을 벗어 난다는 점 ③ 형벌의 집행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고유 업무라는 점 ④ 민영교도소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점 ⑤ 민영교도소제도는 외국에서도 극히 예외일 뿐이라는 점. ⑥국제인권법에서도 교도소는 공공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영교도소 관련 설치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의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고, 시험적인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해보는 방법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교도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와 보석을 확대하는 방향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권위원회 소속의 '감옥을 생각하는 모

임'에서는 1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며, 일반 출소 재소자의 경험도 청취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2일에는 MT를 가서 '재소자 인권을 위한 지침서'(가칭) 기획안을 놓고 깊이있는 토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20일에는 피보안관찰처분자인 김삼석, 조덕원 씨 등과 만나 10월 중으로 피보안처분 당사자들이 각자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이상희 변호사를 초청하여 '적법절차와 인권'이란 주제로 교육을 받기도 했으며, 불심검문 캠페인팀에서 준비한 백서 초안을 9월말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권위원회, 보고서 10월 중순 발간

사회권위원회가 준비해온 사회권 보고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오는 10월 중순에 출판됩니다. 총 5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자로 선보이게 될 이 보고서는 현재 일부가 출판사로 원고가 넘어갔고, 일부는 최종 감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사람생각에서 출판됩니다.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 작업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팀을 재편하여 사회권 실천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업에 참여했던 인원 일부와 새로 보강된 인원들로 이후 사회권 운동에 대한 전망들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매월 1회씩 월례 포럼을 진행합니다.

한편, 사회권위원회가 관여하고 있는 아셈 민간단체포럼준비위는 창립소위 위원들이 모임을 갖기 못한 관계로 9월 30일 창립 일정을 뒤로 미루게 되었으며, 인권분과 모임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창립선언문

1

지금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향해 한 단계 도약을 이루느냐 아니면 전 근대적 암흑사회의 멍에를 짊어진 채 무거운 발걸음을 계속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은 가위눌린 사람처럼 늘 공포에 떨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했다.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를 제약당했으며, 언론인은 진실을 말 못하는 고통을 당해왔다. 예술가는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접어야 했으며, 서민은 술자리에서조차도 주변을 살피기에 급급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상황 한가운데에는 결국 언제나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이런 답답한 상황과의 결별을 소망해왔으며 국가보안법의 질곡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해왔다.

2

국가보안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및 그에 뒤이어 집권여당이 발표한 국가보안법 대폭개정방침은 비록 큰 만족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었다 해도 오랜 세월을 국가보안법의 그늘에서 신음해온 우리에게 분명 한가닥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였다. 작년 말, 유엔 인권이사회가 박태훈, 김근태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하여 사실상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권고한 이후 시대변화 속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현실의 문제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서기에 이른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벽을 넘는다는 사실, 그것은 곧 인권이 억압된 낡은 시대에서 인권이 구현되는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의미한다.

3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그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이란 너무나도 성급한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아무런 이성도, 합리성도, 염치도 없이,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이 나오자마자 또다시 회오리친 색깔공세는 바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전근대적인 암흑사회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오랜 소망은 다시금 짓눌리고 국가보안법은 또다시 기만적 소폭 개정에 그칠 조짐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노선'인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술을 시대의 흐름을 애써 외면하는 기득권세력의 한낱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90년대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냉전체제는 무너졌다. 북한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 북한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그 심각한 식량난을 목도하면서, 수많은 언론인·체육인·예술인·기업가·종교인들의 합법적인 방북을 목도하면서, 남북합작투자와 금강산 관광을 목도하면서, 그래도 '적화통일'의 위협과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냉전수구세력의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국민 대다수는 적어도 국가보안법

최악의 독소조항 제7조 폐지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4

국가보안법, 특히 우리는 제7조가 항상 독재정권의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였으며,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심층에까지 내려가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수구세력들이 끝까지 남기고 싶어하는 조항이 바로 7조이며 UN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7조이며, 국가보안법 구속자 중 약 95%가 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은 7조 폐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최소한 7조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길이라고 믿는다. 이 연대의 힘을 가지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이 국가보안법의 굴레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적극 찾아 나설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비롯한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청산이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굳게 자각하면서 이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1999년 9월 20일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자료>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운영규칙 -

국가보안법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을 염원하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완강한 벽 앞에서 서로의 작은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그 벽을 넘기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을 함께 모색하면서, 강력한 연대를 형성한다.

1. 우리 연대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단체 및 개인, 그리고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 및 개인을 광범위하게 아우른다.
2. 우리 연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및 이적) 폐지를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이를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3. 7조 폐지를 주장하는 조건에서 각 참가단체는 자유로운 개별활동을 펼 수 있다. 즉 이 연대기구 밖에서 대폭 개정운동이나 폐지운동을 할 수 있다.
4. 국가보안법의 벽을 넘어 민주발전을 이룩한다는 공동과제 앞에서 가입단체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한 최대한의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 다수결 보다 전원일치의 정신으로 사안을 결정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론과 설득으로 서로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우리 연대의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1999년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인권교육실; Stand up for HR 번역완료

교육실에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4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포럼아시아 주최의 2차 인권훈련 프로그램에 배경내씨를 참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인권교재인 <Stand up for Human Rights> 번역을 완료하고, 감수를 맡겼습니다. 감수가 끝나는대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실은 다른 교재인 <21세기를 위한 인권교육> 번역에도 매진중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교대 인권학교 강연(9일), 여성의 전화 주최 인권학교 강연(15, 17일), 해오름 사회교육 아카데미 강연(18일), 청소년개발원 주최의 '새로운 천년과 권익 증진의 과제' 세미나 사례 발표(20일) 등도 가졌으며, 인권영화제 부대행사 기획에도 합류했습니다.

9월 6일로 사무국 부서이동 단행

사무국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의 MT에서 결정한대로 9월 6일자로 부서이동을 단행했습니다. 최은아씨가 1개월 휴직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임주현씨가 임신으로 인한 휴가를 9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게 되었고, 김보영씨가 새로운 상임활동가로 충원된 상황을 고려해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호에 내보낸 내용이지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한편, 출산 후 휴직에 들어갔던 김수경씨가 9월부터 다시 출근하려고 했으나, 집안 사정 등이 여의치 않아 내년부터 출근을 하는 것으로 하고 휴직을 연장했고, 대신 1주일에 목요일마다 하루씩 자료실에 결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래군(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사회권위원장 겸임) /편집실장: 염규홍 /총무: 이창조(인권하루소식 겸임) /인권하루소식:

박래군, 이창조, 유해정, 김보영 /인권정보자료실: 류은숙(인권교육실장 겸임), 임주현(권태평 어머니와 김수경씨 보조 결합) /인권교육실: 류은숙, 배경내 /인권영화제: 김정아 /자유권위원회: 서대표, 김정희(국가보안법), 고근예(행형, 보안관찰법), 유점열 /사회권위원회: 박래군, 최은아, 이주영

□ 1백여일 동안 사랑방에서 연수를 받았던 청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의 이효신씨가 9월 17일자로 연수를 마치고,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방에서는 16일 연수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뒷풀이를 가졌습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전주 평화와 인권연대 실무자 2인이 각각 2주씩 연수에 들어오게 됩니다.

□ 동티모르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제민주연대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 집회 등을 조직했습니다. 일단 다국적군의 파병으로 학살의 만행이 일단 진정된 상황에서 이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동티모르 상황을 모니터하고, 모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그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에바다 농아원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려질 지 모른다는 전망을 낳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성재의원은 이사회 정관을 개정한데 이어 교장의 교체, 홍순기 노조위원장의 복직, 농아원장과 직원 채용 공고 등을 했고, 권오일 교사의 복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에바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후의 방향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연대회의는 이성재 의원의 조치들을 환영하면서도 운영 시스템의 완비 등을 통해서 이후 최씨 일가등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9년 8월 재정보고

(99년 8월 16일 - 9월 15일)

전기이월: - 15,352,584원

수 입		지 출	
회비	1,258,300	공과금	115,690
후원금	1,702,384	모꼬치(M·T)비	161,510
사업수익	3,911,800	복사·제본비	111,060
인권하루소식	2,969,300	사무기기 수리·유지비	490,000
구독료	2,869,300	사무비품비	360,000
인권시평 배급	100,000	식비	335,030
인권교육실	75,000	우편·발송비	406,660
교육활동	50,000	운송비	16,000
인권교육길잡이 판매	18,000	연대사업비	10,000
아이들의 인권 판매	7,000	자료구입비(간행물 포함)	54,000
인권정보자료실	267,500	잡비	137,300
자료복사	226,500	전화·통신비	552,739
국가보안법보고서 판매	41,000	집세	800,000
강연·원고료	600,000	출장비	23,700
기타	2,658	활동비	4,320,000
채무		기타	197,000
수입총액:	6,875,142원	지출총액:	8,090,689원
최종결산:	- 16,568,131원		

<8월 운영·자문위원 회비> (가나다 순)

강경선, 고영구, 김경희·전대진, 김순태,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류중원, 박성호, 박수근, 박승옥, 박찬운,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서원합동법률사무소, 성봉경,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윤한봉, 이덕우, 장주영, 차규근, 천정배, 최일숙, 풀무질서점, 하영석, 홍성우

* 『잊히지 않는 사람들』을 쓰신 류춘도님께서 후원금으로 1,0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 허길선, 임현경, 강옥희, 조백기, 이생, 박준건, 이숙현, 신동욱, 박범용님이 소액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잘 쓰겠습니다.

* 흐뭇한 추석 보내시고 미납된 자문위원회비 보내주세요.

<구좌 안내>

농협: 011-01-404581 국민: 015-21-0723-021 우체국: 013292-0011731

지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